

# 光州日那



**1952년 4월 20일 창사** 대표전화 (062)222-8111 kwangju.co.kr 제20520호 1판 (음력 5월 21일) 2017년 6월 15일 목요일



피우진 보훈처장 광일보훈대상 시상 "나라 위한 헌신 감사합니다"

광일보훈대상(光日報勳大賞) 시상식이 14일 광주시 광산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 강당에서 열렸다. 시상식이 끝난 뒤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, 김여송 광주일보사 사장(뒷 줄 왼쪽에서 여섯번째), 피우진 국가보훈처장(〃 다섯번째),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▶관련기사 3면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## 광주·전남 6만 치매환자 관리 '청신호'

#### 文정부 보건의료 정책 1호 '치매 국가책임제' 윤곽 사회적 인프라·환자 보호 경제적 부담 크게 줄 듯

문재인 정부가 '보건의료 정책 1호'로 추진하는 '치매 국가책임제'가 윤곽을 드 러내면서 6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광주·전 남지역의 치매 환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환자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 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〈관련기사 2면〉

특히 광주·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 해 일찍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데다 치매 유 병률도 높았던 만큼 '치매 국가책임제' 시 행으로 치매 초기 발견 등을 통한 예방 관 리 등에 '청신호'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.

치매 국가책임제는 환자 가족이 짊어졌 던 경제적·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 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제도다.

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광 주의 치매환자 숫자는 1만7000여명, 전남 은 4만6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. 이는 광주와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치매 유병률이 10% 이상인 점을 감안해 추정한 수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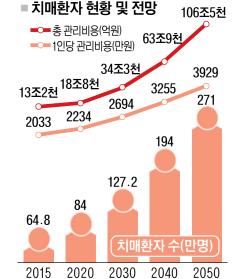
광주·전남지역 치매환자 숫자가 이처 럼 6만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, 초고령사 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인데도 치매지원센 터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었다.

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치매지원센 터는 47곳으로, 이 가운데 25곳이 서울에 집중됐다. 이어 경기와 인천 각 5곳, 대구 4곳, 전북 3곳, 울산 2곳, 부산과 세종, 충 남이 각각 1곳으로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. 이 마저도 국비 지원이 아닌 지 방재정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.

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'치매 국가책임 제' 실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치 매관련 예산 2023억원을 편성했다.

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기존 47 곳에 불과했던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 로 205곳 증설, 총 252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. 이럴 경우 전국 시·군·구 모든 지역에 치매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된다.

따라서 광주는 5개 자치구에, 전남은 22 개 시·군에 각각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가



설치될 것으로 보인다.

이번 추경예산에는 센터 1개소 설치비 와 운영비 등 7억5000만원의 국비가 편성 됐으며, 전체 예산 중 80%가 국비로 지원 된다.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센터에서 치 매예방부터 교육, 조기 검진,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, 돌봄까지 필요한 의료·복 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.

또한,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 료·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

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치매 예 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, 조기 발 견 사업 등을 맡게 된다.

이번 추경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 예산 도 포함됐다.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다. 이 가운 데 광주시는 현재 시립요양병원 2개소에 197병상의 치매전문병동을 운영중이다.

정부는 기존 치매전문병동 외에 나머지 45곳에 추가로 전문병동을 설치하는 데 600억원을 투입한다. 따라서 광주 시립요 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의 병상도 크게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정부의 '치매 국가책 임제' 본격 시행을 앞두고 TF팀을 구성, 치매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"이라며 "또한, 기존의 조례 등을 손질해 행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"고 밝 혔다. / 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정찬주 '그리스인 조르바를 찾아서'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아킬레우스를 연모한 왕후 ▶18면

### "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겠다"

文대통령, 시도지사 간담회 "제2국무회의 헌법 근거 마련"

문재인 대통령은 14일 "연방제에 버 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" 며 "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 다"고 말했다. 〈관련기사 3면〉

문 대통령은 또 "지난 대선 때 자치분 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"며 "개헌 전까지 시 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,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 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 떨까 생각한다"고 덧붙였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 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하 고 이 같이 밝혔다.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문 대통령은 특히 시도지사 간담회 의 제와 관련, "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 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 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"

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 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

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당부했다.

문 대통령은 "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 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'고 하면서도 "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, 특히 청 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 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"고 호소했다.

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병 수 부산시장, 권영진 대구시장, 유정복 인천시장, 윤장현 광주시장, 권선택 대전 시장, 김기현 울산시장, 이춘희 세종시 장, 남경필 경기도지사, 최문순 강원도지 사, 이시종 충북도지사, 안희정 충남도지 사, 송하진 전북도지사, 김갑섭 전남도지 사 권한대행, 김관용 경북도지사,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, 원희룡 제주도지 사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.

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, 김동연 경제부총리, 홍윤식 행자부 장관, 홍남 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, 청와대 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, 장하성 정책실장,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 장, 전병헌 정무수석, 김수현 사회수석, 윤영찬 국민소통수석, 박수현 대변인 등

/ 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### 감사원, 영산강 등 4대강 감사 착수

정책 결정부터 성과 분석까지

감사원은 국토부·환경부 등을 대상으 로 '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'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 일 발표했다.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 번이 4번째이다.

당초 감사원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는 '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'가 포함 돼 있었다.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 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일 목 적이었다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 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. 이틀 뒤에는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 한국환경회의가 '4대강 살리기 사 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 한 공익감사'를 청구했다.

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 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, 건설공사,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과 성과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진다. 감사원은 이번주 중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에 실지감사 를 한다. /연합뉴스

Passion [열정], Vision [꿈],  $T_{
m ruth}$  [진리]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!! 입학문의 학부 062)605-1114 대학원 605-1115

